

'12·29 제주항공 참사' 법률지원단, 사고책임자 고소한다

12·29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유족에게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 광주·전남 변호사들이 각종 의혹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며 사고 책임자 형사 고소에 나선다.

광주지방변호사회 12·29 참사 법률지원단·민중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는 7일 입장문에서 "국내 최악의 여객기 사고로 남은 12·29 참사 발생 4개월이 지났지만 각종 의혹과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상 규명을 위해선 수사 기관의 적극 수사가 절실하다. 현재까지 사고 책임자 한명도 입건되지 않고 4개월이 흘렀다. 유족과 함께 13일 사고 책임자들을 고소해 처벌받게 하겠다"고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또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조사위)의 발표와 보고가 왜곡됐거나 조사가 미진하다는 점을

참사 법률지원단·민변 광주전남, 13일 고소장 제출 예고

"진상 밝히고 책임자 엄벌"... 고소인 참여유족 모집 방침

알 수 있다"며 "진실을 밝히려는 모습보다는 정보를 감추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 관련 의혹으로 ▲조류 충돌 직후 복행 시도 이유 ▲복행 직후 기수를 180도 꺾어 긴급 착륙한 이유 ▲관제탑 대응 적절성 ▲엔진 유지·관리 적절성 ▲활주로 둔덕의 설치·관리와 보강공사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제시했다.

이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국토부(국토교통부)가 조사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또 모든 조사 과정과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유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참사 유가족 일동도 호소문에서 "179명의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무안공항 임시숙소를 지키며 참사 트라우마 속에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고 있다"면서 "조사위는 유족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들은 해외 항공기 사고에서 가장 과잉관제 간 교신기록이나 항공기 운항 데이터를 공개한 사례를 열거하며 유족에게 참사 관련 각종 정보를 적극 공유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률지원단과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유족들을 상대로 고소장 제출 계획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유족들에게 구체적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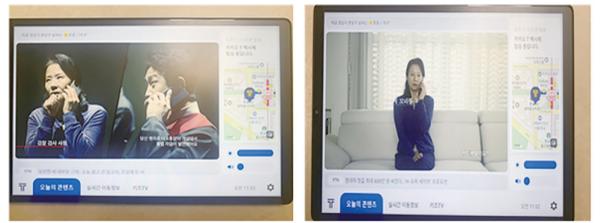
사 쟁점을 설명한 뒤 고소인 참여 여부를 확인한다. 고소 대상에는 사고 원인에 연루된 사고기 운항·정비·공항 시설 관리 관련 주체들과 참사 규명 각 기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29일 오전 9시3분께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동체만으로 착륙하려다 활주로 밖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을 정면충돌하고 폭발했다.

12시간 여에 걸친 구조 작업에도 불구하고 탑승자 181명(승무원 6명·승객 175명) 중 179명이 모두 숨진 채 수습됐다. 생존자는 사고 직후 기체 후미에서 구조됐던 승무원 2명에 불과했다.

1993년 7월26일 아시아나기 해남 추락 사고(66명 사망·44명 부상)보다 사상자 수를 크게 웃돌아 국내 최악의 항공 참사로 기록됐다.

오연철 기자



광주경찰청은 국내 대형 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T'와 손잡고 택시 승객용 모니터를 통한 치안 시책 홍보 영상을 송출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실제 택시 안에서 송출되는 치안 시책 홍보 영상. 사진=광주경찰 제공

광주경찰, '카카오T' 택시 모니터 통해 범죄 예방 홍보

보이스피싱·딥페이크 예방 등 치안시책 소개 영상 송출

광주경찰청은 국내 대형 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T'와 손잡고 택시 승객용 모니터를 통해 치안 시책 홍보 영상을 송출한다고 8일 밝혔다.

일상 교통수단인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 교통 안전,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허위영상물) 범죄 등 다양한 치안 정책을 친근하게 전달하자는 취지다.

이달은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

하기 위한 홍보 영상이 송출된다. 또 공감형 스토리 기반 영상을 제작·송출해 '일상 속 체계 치안' 향상에도 힘쓴다.

광주경찰은 이번 협업이 효과적인 범죄 예방과 플랫폼 기업의 사회 안전 기여 등에 있어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박성주 광주경찰청장은 "모빌리티 플랫폼의 기술력과 사회안전망이 결합,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를 예방하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현근 기자

전남자치경찰위,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도민 안전 지킨다

17개 시군에 스마트폴·지능형CCTV·비상벨 등 시설 설치 지원

지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66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사업비는 17억 5천만 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40%와 60%를 부담한다.

올해 공모에는 1월부터 2월까지 17개 시군이 응모했다. 각 시군은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경찰서와 시군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 회의를 통해 외국인 밀집지역, 다중밀집지역, CCTV 미설치 정

기향로 선착장 등 범죄 취약 장소를 발굴했다.

지난 4월 전남경찰청을 비롯한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진행, 사업 필요성과 주민 참여도, 추진 의지, 효과성 등을 평가한 결과 응모한 모든 시군을 대상지로 결정했다.

특히 올해는 외국인 밀집지역에 범죄 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가점을 부여해

내·외국인 모두 함께 안전한 범죄 예방환경을 조성하려고 한 점이 특징이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향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선정된 시군, 경찰서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정순관 위원장은 "개연성 없는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도민 안전을 확보하도록 CCTV, 비상벨, 스마트폴 등 치안 인프라를 더욱 확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 참여와 시군, 경찰서 협업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는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전민규 기자

전남 문화향유율 54.3% 그쳐... 증가율은 뚜렷

전남연구원 "기반시설 확충, 접근성 향상 위한 전략적 대응 필요"

전남도민의 문화향유율이 50%대 초반에 그친 반면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증가율을 기록해 지역 문화정책의 효과와 함께 정책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8일 전남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 전남의 문화예술 행사 관람률은 54.3%로, 전국 평균 63.0%, 도(道) 단위 평균 57.5%를 밑돌았다.

세부적으로도 도민의 44.8%가 영화 관람을 꼽았고, 대중음악·연예(콘서트, 거리공연 등)는 14.0%, 미술전시회 관람은 3.2%, 뮤지컬은 2.5%, 전통예술 2.0%, 문학행사 1.4%에 그쳤다.

대부분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수치로, 공연예술 분야에 대한 접근성과 다양성, 인식 제고가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 도민들은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할 때 '접근성'과 '내용과 수준'을 중요시했다. 관람의 결심동료는 주로 '가까운 곳에 시설이 없다', '시간이 쪼들려서 가지 않는다' 등으로 응답했다.

반면 2022년 46.5%이던 문화예술 관람률이 2년새 7.8%포인트 상승하며 전국 평균 증가율(5.1%포인트)을 웃돈 것은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추가 지불의사도 뚜렷하다. 도민들은 1년간 문화예술행사를 3.3회 관람했고, 3만

3000원을 지출했는데, 앞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해선 3만8000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관람 동행자로 배우자, 자녀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구, 연인, 부모 형제(친척)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배우자나 자녀와 동행하는 비율이 59.5%로 전국 평균보다 12.0%포인트 높게 나타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권수빈 부연구위원은 "도민의 문화향유율이 전국 대비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은 고무적이지만 세부 장르별로는 낮은 수준이고, 지역별 인구 대비 기반시설 수는 상위권이지만 도민이 일상적으로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근린생활권 내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접근성 향상, 생활밀착형 문화향유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문화향유 증진과 문화복지 실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화기반시설의 양적 확충에 그치지 않고 기반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 등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며, 문화향유 실태 조사를 통한 전남도민의 수요 중심 문화향유 지원 체계를 마련해 문화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정책의 초점이 옮겨져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이승원 기자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개연성 없는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도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역주민, 시군, 경찰 등과 함께 온 힘을 모으고 있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군 공모로 진행된 2025년 이상동기 범죄예방 치안인프라 설치사업 대상지로 함평, 광양, 영암, 완도 등 총 17개 시군을 선정했다.

이상동기 범죄예방 치안인프라 설치 공모사업은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에 스마트폴, 지능형 CCTV, 가로등과 같은 범죄예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광주교육청, 수포자 없는 학교 만든다

수준별 지원... 학교급 전환시기 수학 적응력 특강도

친숙하고 즐겁게 느낄 수 있도록 수학 체험교실 운영, AI 기반 맞춤형 학습 등을 진행한다. 중학생은 수학 개념을 탄탄히 다지고, 학생 스스로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사고력 중심 수업인 성장 중심 수학을 운영한다.

고등학생의 경우 진로를 고려한 미래설계 수학 교육을 한다. 수리논술·수학 면

접 특강·진로 연계 교육자료 제공·동아리 중심의 수학 성장 지원 등 학생들이 수학을 통해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초·중학교 15개교에서는 '수학이 온다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 학생들이 수학 학습에서 성공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학교급이 변화하는 전환기에 수학

을 포기하는 학생이 많은 만큼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중학교 3학년 학생 등을 대상으로 수학 적응력 향상 특강을 한다.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을 위해 실생활 수학 연계 대입 면접 자료집도 개발·보급한다.

이 밖에 학생들의 수학 자존감 회복을 위한 수학교육 현장 연구원의 학생 상담, 수학 교사 2인이 함께 수업 하는 마스코트(Math CO-Teaching)를 비롯해 진로 연계 수학 프로그램인 수학이 있는 강연·수학 독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염선호 기자

경찰이 만취해 룸메이트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베트남 노동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장흥경찰서는 방을 같이 쓰는 베트남 동료들 흉기 살해한 혐의(살인)로 베트남 국적 노동자 A(3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룸메이트 흉기 살해한 30대 베트남인 노동자 영장 신청

A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43분께 장흥군 화진면 숙소에서 룸메이트 B(42)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술을 마시거나 B씨를 살해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숙소에서 술을 함께 마신 동료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B씨와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두 불법체류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스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